

“도, 학술용역 수의계약 남발 개선해야”

허남주 의원, “75%가 수의계약·3분기에 8건 늦장발주... 부실·불법 등으로 이어지는 적폐”

민선이후 지침 등 각종 명목을 들이대며 늘어나고 있는 수의계약에 대해, 투명성 차원의 개선을 촉구하는 주장이 제기됐다.



허남주 의원

13일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허남주 의원(자유한국당)에 따르면 “금년도에 이루어진 24건의 학술용역 가운데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진 발주가 18건에 이르고 있으며, 여기에 제한경쟁이 2건으로 전체 학술용역의 75%가 수의계약, 금액이 17억2000만원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2016년도에도 전체 38건의 학술용역 발주 사업 중 25건 16억6,500만원의 사업발주가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졌고, 5건이 제한경쟁이며 8건이 일반경쟁일 뿐이다”라며, 수의계약 남발에 대한 적폐 개선을 촉구했다. 허 의원은 “학술용역사업은 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근거를 제시해 주게 되고, 그런 이유로 사업 타당성 조사는 물론 각종 방안을 마련하고 계획수립 등을 하게 되는데, 늦장발주로 금년도에만 3분기에 8건의 학술용역사업이 발주되는 등 각종 사업 계획에 차질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렇게 되면, 결국 시간에 쫓기게 되고 발주도 일반경쟁을 피해서 수의계약으로 끼리끼리 짜고 치는 고스톱은 물론 납품도 늦어지게 되는 등 부실용역으로 전

락하게 되는 것으로 이것이 바로 개선해야 할 적폐”라고 집중 주장했다. 실제로 2017년도인 금년도에 전국체전준비단의 ‘2018 전국체전 및 전국장애인체전 상징물 개발용역 3,500만원 등 24건 22억7,400만원이 발주되었는데, 이 중 전체 학술용역의 75%인 18건이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졌고 금액이 17억2000만원에 이르며, 2016년도에도 전체 38건의 학술용역 중 25건 16억6,500만원의 사업발주가 수의 계약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뿐만 아니라 발주 역시 2017년도 3분기에 8건, 2016년도에는 3분기 8건, 4분기에 5건 등 늦장발주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허 의원은 “민선이후 각종 용역에 대한

수의계약이 업자와의 유착 등 많은 문제가 되기도 하고, 측근들과 비선실세들이 계약을 통한 이권을 노리고 접근하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항상 문제가 된다. 법규는 물론 여러 가지 명분이 그럴듯하지만 결국 문제가 될 때 보면 수의계약이 발단이 되고 있고, 입찰보다 계약단가가 올라가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학술용역은 1천만원도 큰 사업에 산인데 반드시 하반기 발주가 필요한 사업이 아니라면 미리미리 발주해야 하고, 수의계약은 피해야 하는 것이 도정전반을 위해 올바른 사업운영이고 투명한 행정”이라며 수의계약 남발에 대한 개선을 강조했다. /김진성 기자

유남석 헌법재판관 취임

유남석(60·사법연수원 13기·사진) 헌법재판관이 13일 취임사를 통해 “헌법재판이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안전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 재판관은 이날 오전 10시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헌법재판관의 소임을 맡게 된 것은 개인적으로 무한히 명예로운 일이지만 앞으로 감당해야 할 역사적 책임과 시대적 사명을 생각하면 두려운 마음과 무거운 책임감이 더 크게 다가온다”며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책무를 정성을 다해 수행하겠다”고 다짐했다. 유 재판관은 소수자 권리 보호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헌법수호의 소명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는 “헌법재판관은 ‘모든 사람이 지닌 존엄성과 가치를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라’는 엄숙한 사명을 국민으로부터 부여받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수결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헌법재판이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안전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투철한 헌법수호의식을 바탕으로 입헌민주주의, 법치주의가 훼손되지 않도록 그 소명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유 재판관은 “보인간의 존엄성, 자유와 평등이 이 시대 이 땅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현돼야 하는지, 다원화된 민주사회에서 표출되는 다양한 가치관과 이해관계를 헌법에 비춰 어떻게 균형을 이룰지 항상 열린 마음으로 심사숙고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변화하는 사회현실과 시대정신의 맥락 속에서 가치관과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인한 갈등을 치유하고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추구하겠다”며 “국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존경받는 헌법재판소를 만드는 일에 일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유승민, 바른정당 신임 당 대표 선출

바른정당 신임 당 대표에 4선의 유승민 의원(대구 동구을)이 선출됐다. 바른정당은 13일 오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지명대회(당원 대표자회의)를 열고 유 의원을 새 당 대표로 선출했다. 바른정당은 지난 9월7일 이혜훈 전 대표가 금품수수 의혹으로 불명예 퇴진한 뒤 67일 만에 3기 지도부 체제에 돌입했다. 당은 세 차례에 걸친 토론회 후 진행된 당원 선거인단 문자투표(책임당원 50%·일반당원 20%)와 일반국민 여론조사 결과 30%를 합산해 지도부를 선출했다. 최종 합산 결과 유승민 후보가 총 1만 6450표를 득표해 56.6%의 득표율로 당 대표에 당선됐다. 이어 하태경 의원이 7132표(24.5%), 장운천 의원 3003표(10.3%), 박인숙 의원 1366표(4.7%)로 2~4위를 기록해 최고위원이 됐다.



힘차게 당기 흔드는 유승민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바른정당 당대표 및 최고위원 지명대회에서 신임 당대표에 선출된 유승민 대표가 당기를 흔들고 있다.

유승민 후보는 당선 직후 수락연설을 통해 “지금 우리는 죽음의 계곡에 들어섰다. 원내교섭단체가 무너져 흩어지고 배고픈 겨울이 시작됐다”며 “이 겨울이 얼마나 길지 우리는 모른다. 그러나 우리가 뚝뚝 뚫쳐서 강철같은 의지로 이 죽음의 계곡을 건넌다면, 어느새 겨울은 끝나고 따뜻한 새봄이 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우리가 합의한 대로 중도보수통합을 위해 계속 노력하자”며 “납고 부패한 기득권 보수, 철학도 정책도 없는 무능한 보수의 과거를 반성하고 진정한 보수의 새 길을 열어 가겠다”고 선언했다. 한편 바른정당 새 지도부는 당장 비교섭단체로 전락하면서 축소된 국고보조금 문제와 원내 영향력 상실 등에 대한 해법을 모색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다. 유 신임 대표 체제가 이를 극복하느냐 여부가 당의 존폐와 직결돼 있는 셈이다. /뉴시스

김성우 “朴 개헌카드, ‘비선실세 국면전환용’ 맞다”

검찰, 전 청와대 홍보수석 진술조사 공개 “개헌카드 국면전환용 얘기 있었다”

김성우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검찰조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개헌 카드가 비선 실세 논란 국면전환용이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 심리로 열린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2차 공판에서는 김 전 수석에 대한 서

증조사(검찰이 제출해 채택된 증거들에 대해 설명하는 절차)가 실시됐다. 검찰은 김 전 수석의 1차 진술조사에 대해 설명하면서 “지나해 (비선실세 의혹 대응 논의 과정에서)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에서 개헌논의를 하자는 얘기가 나왔고 ‘국면전환용이다’라는 얘기가 있었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안 전 수석은 지난 6일 열린 20차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김 전 수석이 먼저 비선 실세를 인정해야 한다고 하자 박 전 대통령이 부정적 반응을 보였느냐”는 검찰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또 “이어 안 전 수석이 강하게 말하자, 박 전 대통령이 ‘꼭 인정해야 하냐’고 했느냐”는 질문에도 “맞다”고 했다. /뉴시스

丁의장 “예산 부수법안 지정, 최소한 당론은 돼야”

정세균 국회의장은 13일 예산 부수법안 기정과 관련 “당론 발의 아니면 최소한도 권고적 당론이라도 (있어야) 우선적으로 고려할 작정”이라고 처리 기준을 밝혔다. 정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 정례회에도 참석해 “제가 예산 부수법안을 지정해야 하는데 지정요구가 굉장히 많다. 원칙을 만들어서 할 작정이요, 자의적으로 제 개인의 취향에 따라 지정할 수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국회의장이 예산 부수 법안을 지정하면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 하루 전인 12월1일에 정부 예산안과 함께 분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예산안 심사가 차질을 빚을 경우 예산 부수법안을 통해 입법 우회로를 마련하겠다는 계산을 하고 있다. 정 의장은 “몇몇 의원이 (발의) 하거나 정부가 의원을 통해서 소위 발의하는 정부입법을 한 것은 부수법안으로 지정하기가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개발언 도중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부수법안 선정에서) 고려할 정보를 좀 주시면 저희도 말씀을 드리겠다”고 하자 “같이 의논은 하겠는데 그러다 보면 배가 산으로 갈 수 있다”면서 “각 당이 당론 발의하는 정도의 비중이 없으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지정이 어렵다”고 재차 기준을 강조했다. /뉴시스

수업나눔과 평가혁신을 통한 즐거운 학교문화 조성 _ 일곱 번째 이야기

www.jbe.go.kr
전라북도교육청
JEOLLABUKDO OFFICE OF EDUCATION

14살 소녀들

어느 때와 같이 세 소녀는 집으로 가던 길이었습니.
건너편 횡단보도에 쓰러져 있는 할머니 한 분.
할머니의 상태가 위급하다는 것을 알고,
어딘가에서 휠체어를 빌려와 가까운 병원으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가족이 올 때까지
모두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
14살 소녀들의 기지와 사랑의 실천.
따뜻한 학생들이 있어
오늘도 전북교육은 웃을 수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잊지 않습니다

가난은 학교 교육이 행복한 교육

지난 4월 전주 우림중 1학년 여학생 세 명(최수빈, 배은수, 박민지)은 효자동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본부 근처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쓰러진 70대 할머니를 발견했습니다. 곧장 가까운 정형외과로 달려가 휠체어를 빌려다 할머니를 병원으로 모시고 갔고, 할머니의 가족들이 올 때까지 병실에서 곁을 지켰습니다. 이 따뜻한 선행은 이날 25일, 할머니께서 학생들에게 고마움을 전하기 위해 학교를 찾으면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